

# “여야 합의로 추경 빠른 처리를… 늦으면 경기회복에 영향”

## 이창용 한은총재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 1700억 ↓  
“주말 회식취소 등에 소비 위축”

“환율,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추가경정예산안을 여(與)·야(野)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관들이 예산안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뒤늦게 하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예측이라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심리까지 자극해 경기회복까지 더디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11월 2조6584억원에서 12월 2조4796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사용액이 일평균 약 17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사태가 탄핵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우 주말 회식을 취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된 것 같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소비)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는 말로만 ‘잘

하겠다’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1.9%)보다 0.06%포인트(p)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43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계엄선포 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당시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430원대 원·달러환율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현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05%p 올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1.9%에서 1.95%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밑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고환율이 외화보유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

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700억달러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強)달러가 지속하면서 점차 줄어 4000억대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에 정책들이 작동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브리핑에서는 1~2년 이내 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개 거부권 ‘만지작’

이르면 오늘 거부권 행사 할수도  
김건희·내란특검 거부권도 예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날(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국회법·국회중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하락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이 증정하는 크리스마스 썸 액자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탄핵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면 목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떨까. 해당 법안 2개는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관련해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은 휴일이니,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 기자 syj@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시장 유동적, 조심스러워 예상보다 시장 충격은 덜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안질의  
“트럼프 리스크… 상황 녹록치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과 관련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상한 것보다는 시장의 충격이 덜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비상계엄 시점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상황이 과거 탄핵 사태보다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4년은 대외 여건상 중국 경제가 좋았을 때고, 2016년은 반도체 수출이 좋은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대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탄핵사태로 인한 시장진퇴도도 (탄핵 정국)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탄핵 소추안은 국회서 의결된 사항이고, 지금으로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연계된 분은 채무조정을, 연계 전 단계인 분은 서민금융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준공절차 완화

>> 1번 ‘9조 규모 7개 프로젝트…’서 계속

아울러,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세 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안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